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3
3. 미국의 관세조치와 한미무역 (CRS 리포트 요지).....	4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6월 의회 주요 소식

상원 공화당, '크고 아름다운 법안' 공개... 세금 감면 영구화·메디케이드 대폭 조정

세금 감면: 2017년 조치 '영구화'

상원안은 2017년 도입된 공화당 세금 감면 조치의 핵심 요소들을 유효기간 없이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방 소득세율 구간이 고정되며, 표준 공제액이 확대되고, 개인 면세 조항은 폐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하원안보다 축소됐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아동 세액공제는 하원이 제시한 \$2,500보다 낮은 \$2,200으로 조정되었다.

팁·초과근무 수당·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신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근로소득 관련 세금 공제도 포함됐다.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새로운 공제가 신설되지만, 전액 공제는 아니며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메디케이드 개편: 확장 주에 더 강한 규제

상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예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메디케이드 확장 주들에 대한 제공자 세금 상한 도입이다. 이 조치는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6%인 상한이 3.5%까지 낮아진다.

녹색 에너지 세액공제: 조건 완화했지만 혜택은 축소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큰 폭으로 조정됐다.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착공 조건은 다소 완화했지만, 세액공제 지속 기간과 혜택은 대폭 축소되었다.

앤디 김 상원의원, 미네소타 민주당 상원 경세서 앤지 크레이그 의원 공식 지지

앤디 김 상원의원(민-뉴저지)이 은퇴를 앞둔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의 후임을 선출하는 민주당 경선에서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크레이그 의원 캠프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서민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하고 원칙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크레이그 의원은 “앤디 김 상원의원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김 의원과 크레이그 의원은 모두 2019년 제116대 연방 의회에서 하원의원으로 첫 입성했으며, 김 의원은 2024년 선거를 통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의 뒤를 이어 상원에 입성했다. 김 의원 외에도 루벤 갈라고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 역시 크레이그 의원에게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태이다. 갈레고 의원은 2024년 선거를 통해 상원에 진출했다.

한편, 이번 미네소타 민주당 상원 경선에는 크레이그 의원 외에도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다. 주요 후보로는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지지를 받는 페기 플래너건 미네소타 부지사, 민주당 소속 빌리 노드 등이 있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항공기 산불 진압 강화법 (S.160)	공포 (2025. 6. 12)	Tim Sheehy (공-몬태나) (2025. 1. 21)	국방부가 상업 판매용 잉여 항공기 및 부품을 산불 진압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35년 10월 1일까지 재승인함. 기존에는 화재 지연제만 투하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물 투하도 허용됨. 또한, 해외 산불 진압 지원 시 국방부 구매 항공기 사용 제한이 제거되어 국제 협력에 활용할 수 있게 됨.
에이펙스 지역 행정기반 강화법안 (H.R.618)	상하원통과 (2025. 6. 18)	Steven Horsford (민-네바다) (2025. 1. 22)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산업 및 개발 구역인 Apex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협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
알래스카 원주민 토지 자율권 강화법안 (H.R.43)	상하원통과 (2025. 6. 18)	Nicholas J. Begich III (공-알래스카) (2025. 1. 3)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 법인들의 토지 소유권 자율성을 강화하는 목적.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토지를 주 정부에 신탁으로 양도해야 했으나, 본 법안은 이를 폐지하고 이미 신탁된 토지도 지역 법인과 주민들의 결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세일럼 해양 국립역사공원 명칭변경 법안 (H.R.2215)	상하원통과 (2025. 6. 18)	Seth Moulton (민-매사추세츠) (2025. 3. 18)	기존의 '세일럼 해양 국립 사적지(Salem Maritime National Historic Site)'를 '세일럼 해양 국립역사공원(Salem Maritime National Historical Park)'으로 명칭 변경 및 승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보호 범위와 역사적 자산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목적
펜타닐 유통 중단 법안 (S.331)	상하원통과 (2025. 6. 12)	Bill Cassidy (공-루이지애나) (2025. 1. 30)	펜타닐과 그 관련 물질을 1급 통제물질로 지정하여 불법 유통을 강력히 차단하고, 합법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목적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임.

미국의회조사국(CRS) 리포트 요약

미국의 관세조치와 한미무역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주요 수출품 일부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 도입된 미국의 기존 관세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양국 모두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자 통상관계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상품 및 용역을 포함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총 2,420억 달러에 달한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가치 기준으로 미국이 체결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하며,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 관세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다.

- 1964년 제정된 「무역확대법」 제232조
-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201조

이 가운데, 「무역법」 제201조에 따라 부과된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1. 제232조 관련조치

-철강 및 알루미늄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로, 2018년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대신 수입 쿼터를 협상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체결된 국가별 면제조치 및 일반 품목 면제를 모두 폐지하고, 적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2024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액은 29억 달러(미국 철강 수입국 중 4위), 알루미늄 수입액은 7억 8,100억만 달러(미국 알루미늄 수입국 중 4위)에 달

하였다. 이후 2025년 6월 4일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각각 50%로 추가 인상하였다.

-자동차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품목 중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에 달한 반면,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품목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의 비중은 약 3%에 그쳤다.

2.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관련 조치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연례 미국 무역 적자”를 불공정 무역관행의 결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특정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차등 관세를 적용하였다.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24년 기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무역적자 가운데 아홉 번째로 큰 규모였다. 하지만 2025년 4월 9일, 대통령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된 관세율을 90일동안(2025년 7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시행된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는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적 논란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대응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당국은 관세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중순, 양국은 양자 간 무역 불균형,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디지털 무역 등을 포함한 6개 주요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통상부 장관은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일정 기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을 통한 미국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25년 3월, 한국의 한 항공사는 미국 항공우주 기업들로부터 327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및 부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미 무역 관계에 대한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와 이전 한국 정부 하에서,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첨단 기술, 반도체 등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으며, 2024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최대 유치국으로, 총220억 달러(전체 한국 해외투자의 34%)가 미국에 투자되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20일 CRS가 발간한 *U.S. Tariff Actions and U.S.-South Korea Trade* (총3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5년 7월 9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E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